

조선대병원 노사 평행선...파업 장기화 우려

임금 2.5% 인상 접근 이뤘지만 인상분 소급 적용 기간 놓고 이견 병원 "경영 악화 감당 못할 수준" 노조 "파업 참여 조합원 늘어날 것"

광주-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상급병원의 하나인 조선대병원 파업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이 떠난 조선대학교병원 의료현장을 지켜오던 간호사들마저 파업에 나선지 4일째가 됐지만, 병원측이 단 한차례도 자율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병원측이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독려할 방침이어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의료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병원지부와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파업 나흘째인 이날까

지 병원 측과 노조 측의 교섭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노조와 조선대병원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당초 노조는 임금 총액 대비 6.4% 인상을 요구했고, 조선대병원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동결을 고수했다. 팽팽하게 대치하던 양측은 파업돌입 전날인 지난달 28일 밤샘 줄다리기를 교섭을 통해 타결의 희망을 밝혔다.

병원측이 애초 임금동결 입장에서 1.6% 인상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고, 결국 노조가 제시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5%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인상분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교섭은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 3월 분부터 소급적용을 주장했지만, 병원측은 9월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고수한 탓이다.

소급 적용 시기에 따른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을 조래한 노사 양측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지난달 30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조선대병원을 찾아 입장 조율에 나섰지만, 여전히 양측의 만남 자체는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전남지노위 위원장은 병원장, 노조측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도 전공의 파업의 장기화로 경영이 악화돼 소급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병원 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교섭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내일부터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파업 첫 날 병원측은 총 조합원(1200여명)의 4분의 1수준만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조선대병원 의료진 총 2000여명(의대교수 150여명, 보건의료 노조 조합원 1200여명, 비조합원 65여명) 중 15%에 해당한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인력 400여명은 의료현장을 지킬 방침이지만, 파업 참여율이 40%에 달하면 커다란 의료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전공의 225명의 사직서를 수리한 전남대병원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달 30일까지 '진료전담의사' (31명) 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도, 경찰청 등과 간담회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협력

전남도가 최근 확산하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남도경찰청, 1366전남센터,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 시군, 전남도의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추진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피해자가 상담 및 성범죄 영상물 삭제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로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경찰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1366전남센터나 목포여성상담센터,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로 연계해 영상물 삭제를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자의 치료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접수 및 지원 등을 받도록 경찰청과 연계 지원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목포)' 외에 '전남도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순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접수 및 초기 긴급삭제 지원, 수사기관, 의료·법률 연계 지원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활동을 펼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조선대 법인 이사장과 갈등

부총장·처장단 보직 사퇴 의사

조선대학교 법인과 구성원간 내용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법조선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이사장 퇴진운동에 돌입한데 이어 법인 이사회가 대학 보직인사에 제동을 걸었다며 학교 부총장 등 보직간부들이 사퇴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1일 조선대학교 이사회 등에 따르면 전제열 부총장 등 보직 간부 10명은 지난달 30일 학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법인 이사장의 과도한 학사 개입으로 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본부는 8월 말 정년퇴직으로 발생한 보직 및 내년도 글로벌대학30 사업 준비를 위한 직원인사를 법인에 제정했다"며 "법인에서는 학내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이유로 보직과 신규임용 사항을 제외한 인사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 이사장의 이번 결정은 인사관리 및 글로벌대학30 사업을 준비하는 학사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학사 업무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부총장과 처장단은 법인 이사장의 이번 결정을 전면 거부하며 보직을 사퇴한다"고 덧붙였다.



ACC월드뮤직페스티벌 인파 '2024 ACC월드뮤직페스티벌'이 열린 지난달 30일 ACC 빅더 스테이지에서 모코로의 '엘레먼트 오브 바라카' 공연을 시민들과 국내외 음악가들이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폭염 주춤...모레부터 다시 기승

내일 오전까지 5~20mm 비

광주·전남에 때늦은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폭염이 잠시 주춤하다 4일부터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 전 지역에 발령됐던 폭염경보가 지난달 31일 폭염주의보로 하향돼 3일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1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2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29~32도, 3일에는 30~32도에 분포하는 등 기온이 평년

보다는 높지만 폭염 절정기보다는 2~3도 가량 낮아지겠다고 내다봤다.

2일 오후부터 3일 오전까지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5~20mm 비가 내리겠다.

광주·전남 지역에 덥고 습한 수증기를 유입하던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에서 소멸되고 한반도 북쪽 상층에 자리잡고 있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함에 따라 한 낮 최고기온이 잠시 떨어지겠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열대야도 대부분 지역에서 해소되겠다.

다만 기상청은 오는 4일 이후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다시 확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돼 광주·전남은 다시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열대야도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는 시기로 접어드는 만큼 온열질환뿐 아니라 호흡기질환 등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5월 20일~8월 31일)에 따르면 광주·전남 온열질환자수는 총 426명(광주 62명, 전남 364명)으로, 사망자는 4명(광주 1명, 전남 3명) 발생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남도,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

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추석을 앞두고 11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와 수입산 소고기 한우 등급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 굴비 등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원산지 미표시 경우,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와 함께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도 할 계획이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해 한 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등 민생분야 위반행위 43건을 단속해 34건을 입건하고 9건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